

문화방송 노보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방문진 이사 선임,
여야 정치권은 손 떼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다. 촛불 정신과 총파업 투쟁에 힘입어 MBC와 KBS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이후 처음 맞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다. 그러나 정치권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일환으로 방송관계법 개악안 합의를 추진했다. 현행 법 조항에도 없는 여당과 야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려 했다. 여야 정치권이 대놓고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이다. 명백히 촛불 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방송관계법 개악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8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또 다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여야 6대3, 7대4 추천 관행'을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출하는 구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여야 6대3 나눠먹기 관행,
이제는 끝내자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KBS 이사 선임에 관련된 방송법 46조 3항도 마찬가지다.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이사추천권 나눠먹기는 현행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분들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라는 취지

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그 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드러내놓고 개입해왔다.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극명한 폐해로 귀결된 사례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방송 장악이었다.

정권이 국가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불법을 자행하며 MBC와 KBS를 장악했을 때 공영방송 이사회는 그 선봉대 역할을 했다. 방문진과 KBS 이사들의 극도로 치우친 이념 편향성, 막말, 부적절한 처신, 불법 행위 공모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추락했다.

특히 MBC의 경우, 방문진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노동조합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경영진과 모의하고 종용했다. 상습적으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가 끊다 못해 터졌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문진 이사들은 오히려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조장했다. 이사들은 지역사나 관계사 임원들로부터 차량 제공과 명절 선물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 국민의 자산인 방문진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특혜 시비에도 휘말렸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써야 할 공금 1억 원을 자신들이 참여한 극우단체들에 지원하는 행태까지 드러났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각계 참여로 구성하자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대에 역행하고 법 정신을 무시해온 여야 나눠먹기 관행은 끝내야 한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서 손을 떼달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방송법 정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권을 행사해달라.** 공영방송 이사는 의식 숫자나 정치 상황에 따른 전리품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의 자산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기구다. 법 정신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이사진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안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학계, 방송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담합하고 나눠먹는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참여, 속의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돼야 한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공영방송 이사 여야 추천 폐지”

국민의 뜻 역시 이런 시대정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달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관례였던 여야 정치권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2일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께 요청 드린다.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해 방송 독립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 드린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참여해달라. MBC와 KBS가 지난 시절 굴종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노동조합은 오직 국민의 편에서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각계를 대표하는 국민이 이사회 참여 정치인 참여 제한, 방송사 직원 대표 참여 보장

헌법재판소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인 참여 제한”

독일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이사회인 ZDF 방송평의회는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수다. 원래 77명의 이사였고, 줄어든 현재도 60명이다. 독일 역사의 분권성과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살려 정당, 주정부, 각종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위원을 맡는다.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종 단체에서 정치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직 관료와 정치인이 전체 이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운영주체인 방송평의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독일 기본법 정신에 따라 **정치인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ZDF 방송평의회 이사진에 정치인의 비중이 1/3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현재 ZDF 방송평의회 위원의 숫자는 60명으로 줄었고 정치인의 수도 1/3 이하로 떨어졌다.

“각계의 전문성 존중”

프랑스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지배구조는 행정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나뉜다. 관리감독을 하는 이사회 격인 행정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의회, 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회의의 추천위원은 물론 **프랑스 텔레비지옹 직원 대표 2명**이

참여한다. 정부 추천위원에는 문화부 미디어 및 문화산업위원회 의장과 국립영상원 의장이 포함돼있다. 의회는 문화 관련 상임 위 의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시청각최고회의는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각계에서 5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외형적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산업 및 영상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 직원 대표를 위원으로 임명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는 구조이다.

“공영방송 BBC 운영, 국민의 뜻에 따라”

영국



영국 BBC 지배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BBC 트러스트가 지난해부터 사라졌다. 감독과 규제를 맡던 BBC 트러스트와 운영을 맡던 BBC 집행이사회로 이원화돼 있던 구조가 BBC 이사회로 통합된 것이다.

BBC 이사회는 14명으로 구성된다. 사장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 지역 대표 (현재 북아일랜드 대표는 공석), 전문성을 가진 각계 인사 5명, 그리고 BBC 집행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들어간다. 집행위원 이사들은 모두 BBC 각 부문 책임자(Director)들로 구성돼있으므로, 이들은 직원들이다. 즉 **이사회에 BBC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물론 규제 기능이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오프콤으로 이관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는 한다. 방송 진행자의 심각한 성

범죄를 은폐한 의혹과,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은 외부 규제 필요성의 논거가 됐다. 그러나 BBC의 상징이었던 독립적, 자율적인 내부 규제가 정부의 규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변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영국 왕실의 칙허장이다. 이 칙허장은 BBC의 공적 목표, 재원, 조직, 규제 시스템까지 BBC의 기본을 모두 담고 있어 BBC의 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약 10년마다 갱신되는 이 칙허장의 결정 과정이다. 이번 결정에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19만 개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고, 영국 국민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수행됐다. 수많은 자문위원과 단체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향후 10년 간 BB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재정립됐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미래를 결정한 것이다.**

종사자 참여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검토해야

이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고정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진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방송 산업의 모습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시청자에게 복무하는 적합한 모델을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재정립의 기저에는 국민과 종사자들의 뜻을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주목할 점은 종사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이다. 앞서 봤듯 노동이사제가 보편화돼 있는 독일 ZDF 이사회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인사를 이사로 구성한다.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이사회에는 직원 대표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임명한 시청자 대표가 참여한다. BBC 이사회

도 정치권 인사 대신 구성원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두 **현장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촛불 혁명은 국민의 참여와 속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신고리원전은 국민들의 토론을 거쳐 건설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왔다. 노동이사제는 촛불 혁명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

MBC 사장, 국민의 손으로!

방문진은 위임받은 권한을 시청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법률에 따라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청와대와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들이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은 ‘MBC 사장 임면권’인데,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이 특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MBC 사장이 되고자 하는 인사들도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전제를 망각한 채 방문진 이사들과 배후에 있는 정치권을 향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방문진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며 ‘MBC 관리지침’이라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MBC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했다. ‘관리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중장기 방송·경영 정책과 투자·개발계획, 관계회사 임원선임, 직원 성과급 배분 등은 방문진 이사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MBC의 반기별 운영계획 및 실적, 감사 내용,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방문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안들마저 실제로는 의결 사항처럼 운영하면서 MBC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오너” 행세를 해왔다. 일부 방문진 이사들은 ‘관리지침’을 명목으로 관계회사 임원을 선임하는 데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MBC 노사 문제에 개입해 단체협약 파기를 종용했었다. 심지어

편성에도 개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방송을 끼워넣은 사례도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현재 MBC 지배구조가 확립된 지 30년, 방문진의 한계는 명확해졌다. ‘대표성과 전문성’은 포기한 채 정치권에 얽매이고 “오너” 행세를 해온 방문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노동조합은 방문진의 가장 큰 권한인 MBC 사장 선임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한다.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방문진, 그리고 배후에 있는 정치권이 간접적으로 MBC 사장을 선출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

KBS 사장 선출, 신고리 원전 건설 -시민의 지혜 모아 결정

지난해 “72일 파업”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퇴진한 후, 방문진 이사회는 새 사장 선출 과정에서 “공영방송 MBC의 재건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사장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후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질의한 내용을 수렴해 최종면접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일종의 시민참여형 면접인 셈이다.



KBS의 경우, MBC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방식을 도입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월 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권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 ‘시민자문단’ 142명을 모집했다. 시민자문단은 정책발표회에서 후보자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비전 점검, KBS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개별 후보자의 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숙의·질의, 후보자 상호토론에 참여했다. 시민자문단은 4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 기준으로 각 후보자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공영방송 철학·비전/KBS 정상화 방안/KBS 미래 전략/시청자 권익 확대 방안 등

이며, 시민자문단의 평가는 KBS 이사회의 최종 면접 과정에서 40%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빌린 사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치) 건설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지만 이에 대해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대립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471명을 선정하고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숙의과정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고, 막바지에는 2박 3일 동안 합숙하며 종합토론회와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합숙기간 중 건설 중단과 재개를 요구하는 측의 발표를 듣고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침내 시민참여단은 설문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라는 의견을 냈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정부 역시 이 결과를 받아들여 원전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MBC 사장 선임에 시민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방문진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등 부적절한 인사들을 MBC 사장으로 선임했고, MBC를 망가트리는 데 일조했다. 지난 10년 동안 방문진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국민이 방문진에 위임한 권한 일부를 국민이 다시 되찾아올 때이다.

2018 전국 민실위 회의 보고

지방 선거 보도, 이렇게 해봅시다! 유권자 · 정책 중심 선거보도를 위해

가장 긴 시간 이뤄진 논의는 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보도 공동 모니터였다. 평상시에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대선)나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비해 유권자와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다. 대선 투표율이 70%대, 총선 투표율이 50% 중후반대를 기록하는 반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보통 50% 초반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자체에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여론조사 상 격전지 숫자가 다른 지방선거 때보다 적다. 외부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월드컵 같은 대형 일정 속에서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전국 동시 선거이지만, 지역별 아젠다가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 그룹이 매우 세세하게 나뉘고 이에 따라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중요도도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별 뉴스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보도 종사자들의 다른 지역 뉴스에 대한 접근권은 떨어진다. 따라서 민실위는 지부 별로 각 지역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해 정보 공유를 할 필요성이 높다는데 공감했다. 1주 단위로 각 지역 MBC의 선거 관련 방송 중 문제있는 보도와 프로그램은 없는지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내는 것과 함께 본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보도의 본령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MBC의 선거방송 준칙과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의 준칙 역시 이런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실위의 고민은 인물 중심, 여론조사 중심, 유력 정당 중심의 선거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면서도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표권을 알차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모였다. 선거 보도의 패러다임이 정책과 공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큰 원칙 하에 선거 보도 모니터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 중심! 지지율이 아닌 정책 중심!

1) 유권자의 목소리

단순히 후보의 유세 장소만 쫓지 말자. 유권자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지역 현안과 아젠다는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

의 입장을 묻고 보도에 반영해야 한다. 현안과 관련 있는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 그들의 요구를 담아야 한다.

2) 정책 검증 · 공약 검증

후보에 대한 인물 소개보다는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인지, 정책과 공약이 적절한지, 실현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여론조사 보도는 신중하게

여론 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론조사 순위만을 쫓는 경마식 보도는 밴드웨이 효과를 가중시키고, 선거보도에서 정책과 공약, 현안, 유권자의 목소리를 소외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는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니라 표본 응답자의 뜻을 반영할 뿐이다. 여론조사의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오차 범위 내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

4) 소수 정당, 군소 후보의 목소리

소수 정당과 군소 후보에 대한 보도는 단순한 당위가 아니다. 선거 보도를 지지율 중심이 아닌 유권자의 요구, 정책과 현안 중심으로 옮겨가면 자연스럽게 소수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5) 엄정한 선거 감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언론의 의무는 공정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는 데에도 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자.

모범 보도 사례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어떤 시도를 해야 할까. 피상적으로 비칠 수 있는 선거 뉴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민실위는 각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선거 보도를 공유하며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서울MBC '아침 한 끼']

전국 민실위 회의가 열렸던 5월 14일부터 서울 MBC는 <뉴스투데이>에 <아침 한 끼>라는 코너를 방송하고 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슈가 되는 인물과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는 코너이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이 출연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 시장에 이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가 출연했다. <뉴스투데이> 생방송에서는 5분 가량의 축약본이 방송되고 이어서 20분 가량의 인터뷰 영상이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울산MBC '후보자를 만나다']

울산 MBC 역시 <뉴스투데이>에서 울산 지역 후보들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후보는 물론 울주군 등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1대1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루에 후보 한 명씩 약 7~8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면서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받고 있다.



위 두 방송은 아침 <뉴스투데이>에서 7시 30분 이후 시간대에 배치되고 있다. 지역별 자체 뉴스가 나가는 시간대이다. 따라서 이 시간에 지역 후보를 소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종의 맞춤형 뉴스가 된다. 후보를 한꺼번에 병렬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명씩 긴 시간을 할애해 소개하는 방식이어서 공약이나 후보자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상대적으로 노출 기회가 적은 군소후보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 방송에 있어 반복되는 고민 중 하나는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불거지는 후보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이다. MBC 선거방송 준칙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를 토론 프로그램 출연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군소 후보'에게는 별도의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군소 후보가 한 두 명으로 적은 규모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소 후보가 적으면 토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지역 뉴스 시간을 활용한 후보 심층 인터뷰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14일 MBC본부 전국 민실위 회의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지부 민실위 간사들이 한 자리에 모

인 건 3년 만입니다. 안건은 3가지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6.13 지방선거 보도 공동 모니터

2. 협찬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 방안
3.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프로그램 상 전면 개편

[제주MBC '6.13 지방선거 아젠다']

제주MBC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선거보도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권 확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제2공항 개발 문제' 등 제주 지역 지방선거의 10대 아젠다를 함께 선정했다. 그리고 각 아젠다 별로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를 스펙트럼화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정책과 공약 중심 보도를 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시청자를 위해 단순한 찬 반 입장을 전달하는 대신 좀더 구체적으로 후보들의 생각을 정리해 시각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형식을 준비할 시간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선거를 거치면서 조금씩 누적될수록 MBC도 공영방송 선거보도의 본질에 점차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MBC 모든 지역사들이 이런 시도들을 참고해 선거 보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협찬 프로그램의 폭증, 제작 자율성 회복은?

지역 MBC 구성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협찬 프로그램 문제이다. 지역사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협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재철 체제 이후 낙하산 사장들이 매출, 이익과 같은 숫자를 실적으로 강요하면서 비용 절감이 최대 목표가 되어버렸다. 자체 예산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 됐고, 연간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나 지역기업의 협찬을 어느 정도 규모로 따낼 것인지가 이미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러면서 협찬 프로그램이 과도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이어지는 현상이 고질화 됐다. 심지어 계약을 할 때 원래의 계약 대상 프로그램 외에도 뉴스 등 다른 프로그램에 일정 시간 이상 지자체나 기업의 입장을 그대로 방송해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협찬을 미끼로 지역 방송과 언론을 길들이려는 지자체도 있다.

이는 구성원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인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방송법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리 때문에 구성원들이 내적 갈등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민실위 간사들은 털어놨다.

지역사는 구성원 숫자가 적은 편이다. 제작 현장에서 협찬 영업 관련 부서로 인사가 났다가 다시 제작 부서로 돌아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면서 경계가 흐려진다.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칸막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MBC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협찬 때문에 보도와 제작 부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경영 수지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지키며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MBC 강원영동 역시 협찬을 해온 주체의 무리한 뉴스 편성 요구를 과업 과정에서 거절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대가로 영업을 하는 관행은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대책이 아니라 떨어지는 매출을 억지로 메워내기 위한 미봉책이었다. 문제를 푸는 대신 문제를 가리려는 이런 미봉책이 여러 해 쌓여오면서 지역사의 상황은 쉽게 매듭을 풀기 어렵게 엉켜 버렸다.

민실위 간사들은 "협찬과 캠페인 프로그램을 많이 따왔다고 해서 MBC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졌거나 구성원이 제작 역량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협찬 중심 영업은 지역 시청자들에게 보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구성원의 목표와 엇박자를 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해결의 한 축이라면 또다른 전체 조건은 바로 시청자들에게 MBC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일이다. 지역사 경영진 역시 구성원들에게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역 공영방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시청자의 지지는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협찬을 통한 지자체와 기업의 지역방송 길들이기는 힘을 잃을 것이다.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상 좋은 프로그램상...노동조합의 상으로

마지막으로 민실위 간사들은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좋은 프로그램상'의 전면 개편을 논의했다. 그동안 좋은 보도·프로그램 상은 전국 민실위 간사들의 투표로 1개월 단위로 수상작이 정해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과업과 제작 중단 국면을 거치며 잠시 중단됐었다.

노동조합은 "공정방송과 방송독립 실현을 통한 방송민주화", "공정한 여론이 지배하는 민주사회", "자본과 권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창립 정신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실위는 공정방송을 위해 버텨온 지난 10년의 싸움과 노동조합의 창립 정신을 '좋은 보도·프로그램상'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특종 보도나 참신한 기획 프로그램 같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노동, 인권, 환경,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라는 명확한 기준

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선정 기간을 확대해 이런 기준에 맞는 보도와 프로그램이 나올 때에만 수상작을 선정하기로 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다른 외부의 상보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MBC사장은?”

이용마 조합원 인터뷰

이용마 기자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앞장서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공영방송 사장과 검찰총장을 왜 국민이 못 뽑느냐”며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시민의 손에 맡길 것을 최초 제안했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시민들로 구성하는 ‘국민대리인단’ 도입을 주장했다. 판교의 자택에서 만난 이용마 기자는 더 건강해진 모습이었고 목소리에도 기운이 넘쳤다.

Q) ‘국민대리인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 우선 시민들 중 50~1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첨해 사장추천위원회(이하 “국민대리인단”)를 결성합니다. 이들은 방문진 이사진 또는 국회의원들이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하는 것을 참관하고 개별 후보자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대리인단이 최종 투표해서 사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배제하자는 취지예요.

Q)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대리인단’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이들의 결정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시민참여단이 각계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했어요. 김지후 공론화위원장도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대해 지혜롭다고 극찬했어요(※편집자주: 김지후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참여단을 “471명의 현자(賢子)”라고 표현했다).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사장을 선임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사장후보자들을 청문한 후 시민들이 평가하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지혜의 산물이 나올 것으로 봐요.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정당 지지여부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걸로 기대해요.

Q) 여야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직접 추천하고 사장을 특별다수제로 선출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까지도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는 권한은 여야 정치권에 있었어요. 즉 정치권의 기득권인데, 이것을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는 거고, 사장 선임에도 직접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사 선임권을 돌려주자고 주장해서 정치권이 그것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사장 선임 방식부터 바꾸자.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통해 사장을 간접 선출하는 구조를 끊어버리자.’라는 주장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MBC 사장이 되려는 이들

은 시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Q) 요즘 MBC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이) <뉴스투데이>, 특히 “마봉춘이 간다” 코너를 꾸준히 보고 있어요. 완성도를 떠나서 접근 방향이 좋아요.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거든요. 1인 시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1인 시위하겠어요. 상대는 거대기업이나 관공서 등 조직화된 세력이에요. 뉴스가 약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 결국 권력, 자본 등 기득권층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MBC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은 권력을 중심에 두고 취재해요. 출입처를 보더라도 국회, 검찰, 중앙부처 등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기자들이 고용노동부에는 출입하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출입하나요? 기사에서 정부 부처 자료와 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정부부처를 여러 취재원 중 하나로 비중을 낮추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우리 사회가 평등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출입처 시스템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 취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관행을 벗어나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Q) MBC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이) 지난 6개월 동안 고생 많았을 거예요. 폐허 위에서 재건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정리할 일도 많고... 쉽지 않겠죠. 안쓰럽고, 함께 하지 못해 아쉽고요. 한가지 당부하는 건 ‘후배들이 미래다’라는 겁니다. 내 나이도 어느덧 오십이 넘었어요. 20년 넘게 MBC를 다닌 선배들은 기존 관행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지 못하는 점도 분명해요. 선배들은 후배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죠. 후배들이 5년 후, 10년 후 MBC의 주역이잖아요. 곧 회사를 떠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정영하 조합원과 조능희 전 조합원이 이용마 기사를 방문했다. 그날 오후 이용마 기자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병원까지 함께 가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용마 기자가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국대의원회 승인 보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4월 25일 정기
대의원회를 열어, 2017년도 회계 결산
보고 및 2018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
인했다.

● 2017년도 예,결산 대비표 및 2018년 예산계획

(2017.3.~2018.2. / 단위 : 원)

항목	2017년 예산계획	2017년 수익/집행	2018년 예산 계획
이월금	681,386,233	681,386,233	632,529,582
조합비	1,080,000,000	1,396,251,475	1,580,000,000 ¹⁾
예금이자	2,000,000	479,435	500,000
기타	0	74,912,300	289,895,600 ²⁾
수익총계(A)	1,763,386,233	2,153,029,443	2,502,925,182
본부운영비	823,000,000	761,795,716	1,195,000,000 ³⁾
지부 운영비	410,000,000	326,286,608	632,000,000 ⁴⁾
기타 (예비비)	200,000,000	432,417,537 ⁵⁾	421,891,810 ⁶⁾
비용총계(B)	1,433,000,000	1,520,499,861	2,248,891,810
계 (A)-(B)	330,386,233	632,529,582	254,033,372

- 각주1) 조합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조합비는 전년
수익 대비 약 1.8억원 증가 예상
- 각주2) 지난 2014년, 2016년 두 차례 임금보전
기금이 부족하여 조합비에서 특별교부했던
2.9억 원을 다시 조합비로 반납받을 예정.
- 각주3)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그동안 임금보전
기금에서 지급해왔으나, 해직자 전원 복직
으로 임금보전 기금이 올해 폐지될 예정. 따
라서 전임자 급여를 올해부터 조합비에서 직
접 지급하게 된 것이 본부 운영비 증가의 가
장 큰 이유
- 각주4) 조합비 징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부
로 교부하는 지부 운영비도 전년 대비 약
3.1억원 증가
- 각주5) 2017년 9-11월 총파업으로 기존 예비비
2억원에 더해 2.3억 원 추가 지출
- 각주6) 2014년 통장 정리 과정에서 정산되지 않고
조합비 통장에 남아있던 임금보전 기금 3.2
억 원을 다시 임금보전 기금 통장으로 반환하
여 정산할 예정. 순수 예비비는 1억 원 책정.

● 2017년도 쟁의 기금 (임금보전)

(2017.3.~2018.2. / 단위 : 원)

구분	2017년 결산내역
작립	540,621,074
집행	577,848,237

- 임금보전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2018년에 쟁의기금(임금보전)은 정
산 후 폐지될 예정.

우리 다시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 세계 노동절 행사



지난 5월 5일 일어난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사고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뿐 아니라 시청자들, 그리고 MBC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부인사가 참여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

고, 조사 결과 제작 시스템의 심각한 실패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지난 13일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

이 MBC의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경근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이후 SNS에 글도 올렸다. 노동조합은 유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이를 지면에 옮겨 실는다.

MBC 전참시 조사결과를 보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라도 ‘우리’ 뒤에 숨은 ‘나’ 를 고백해야 합니다!!”

MBC의 전참시 조사결과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사자인 조연출 등 전참시 제작진이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인지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알까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화문광장 돌마고 집회에서 “여러분들의 사장이, 보도국장이 아니라 바로 진도에 있던 여러분들이 우리를 두번 죽였다”고 외친적이 있습니다.

이후 MBC와 KBS 노조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안산합동분향소를 찾아와 “만드시 과업을 성공하고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겠다. 철저히 반성하고 제대로 된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매우 구체적인 사과와 반성을 세월호유가족과 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보도,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잘못 보도했는지, 어떻게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

고 여론을 호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세월호참사 당일부터 취재하고 촬영한 것들을 모두 다 꺼내놓아야 한다. 방송사 자체적으로 보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징계하는 건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보도했지만 결국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을 죽인’ 바로 그 취재와 촬영영상 등을 다시 돌려보며 진짜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과 사장을 바꾸고 법과 매뉴얼과 방송시스템과 윤리강령을 바꿔도 정작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카메라를 어디에 놓고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결국 피해자/유가족들에게는 “기레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언론인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부당한 외압과 지시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광고의 유



혹을 절대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과 교육 이전에 철저한 자기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의 신념, 방송언론인의 윤리가 아니라 내 신념, 내 윤리가 있어야 “우리” 뒤에 “내”가 숨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전지적 참견시점>의 조연출 등 제작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징계와 프로그램 폐지보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제대로 된 방송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더 바랍니다. 그런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경근 위원장의 페이스북 발췌



유경근 위원장 5월 13일 발언

“해당 부분을 편집한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다가 가장 궁금합니다. 담당 조연출뿐 아니라 예능본부 전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소 하던 대로 한 건데 운이 없어서 일이 터졌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고의성 여부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건 그것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방송 제작 종사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별 생각 없이 한 작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꼭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 종사

자로서 책임감, 개념, 왜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한다는 전제하에, 이 일을 계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터부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때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것이 우리 유가족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건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